

호텔롯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목적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괄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4.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5. 불공정거래행위 유의사항
6. 부당공동행위 유의사항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9. 2021년 12월 30일 시행 개정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목 차

-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목적**
-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괄**
-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 4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 5 **불공정거래행위 유의사항**
- 6 **부당공동행위 유의사항**
-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9 **2021년 12월 30일 시행 개정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목적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목적

미션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 수립 및 준법 문화 확립

목표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기업활동의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전 임직원은 준법경영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적극 동참한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방지대책을 통하여 준법 문화를 확립한다.

8대 요소

운영 목표

CP 기준과 절차 마련 시행

- 전 임직원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실천
- 필요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구체적 행동강령 표명을 통한 전 임직원 인지 및 이해
- CP 운영을 적극 지원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이사회를 통한 자율준수관리자 지정
-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정기 및 수시 교육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효과적 운영

편람 제작 · 활용

- 일상 업무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지침 반영
-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한 문서 또는 전자파일로 제작

내부감시체계 구축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내부제보 활성화
- 상시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 법 위반에 따른 적극적 제재 및 재발 방지
- 내부 제보 등에 대한 포상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개선 조치 시행

*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9. 10. 22)

2021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선포 및 준법경영 선언

2021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선포 및 준법경영 선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롯데호텔의 밑바탕에는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문화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1973년 故 신격호 명예회장님께서 「관광입국」의 신념 아래 설립한 우리 호텔이 벌써 48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호텔은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아시아 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 유럽,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전세계의 고객에게 롯데호텔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호텔 중 유일한 글로벌 체인호텔인 롯데호텔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롯데호텔만의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문화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호텔이 2014년 5월 2일 처음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포한 이후 7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호텔은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7년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신설,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조직 개편, 2019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통한 각종 체계 보완 및 고도화, 2020년 전담조직 신설, 매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개정 등 컴플라이언스 전 영역에 걸친 준법시스템 구축과 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그동안 임직원들의 법 위반 소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의 신뢰와 파트너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체계로서 원활히 기능하여 왔습니다.

2021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선포 및 준법경영 선언

우리 호텔 임직원들은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준법경영과 공정거래와 관련된 아래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명심하시어 업무 수행에 항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롯데호텔 임직원 행동강령]

1. 부패 및 부정청탁 금지 — 아무리 작아도 대가 없는 호의는 없습니다.
2. 공정거래 법령 준수 — 공정과 신뢰가 우리와 파트너사를 한 팀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3. 파트너 존중 — 파트너십은 상호존중 위에 세울 때 공고해집니다.
4. 공정한 경쟁 — 공정한 경쟁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5. 합법적인 정보수집 — 정보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지침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 호텔 임직원들에게 내재화 되어 준법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일조하도록 항상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정행위와 불공정행위 등 위법·불합리한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정직함과 투명함에 대한 고객과 파트너사의 신뢰를 해하고 우리 호텔의 컴플라이언스 경영문화를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벌할 것입니다.

앞으로 롯데호텔의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는 전세계에 뿌리 내릴 것입니다.

우리 호텔은 2020년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업무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부패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해외 체인호텔의 주요 컴플라이언스 영역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점검을 통하여 해외 체인호텔에도 국내 수준의 선진화된 컴플라이언스 경영문화를 적용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텔은 우리가 소중하게 가꿔온 컴플라이언스 경영문화를 글로벌로 확장시켜 전세계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고 전세계 파트너사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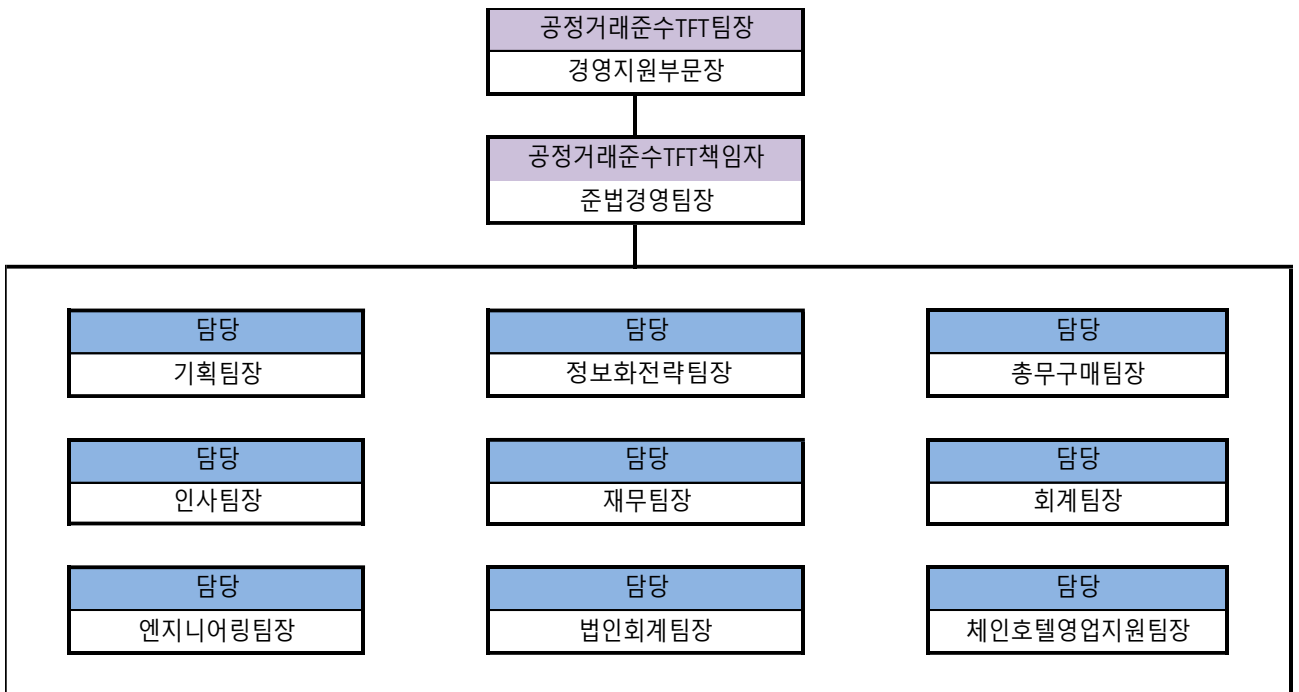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21. 05. 04.
주식회사 호텔롯데
대표이사 김 현 식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구조

* 전원 겸직 발령

구분	내 용
TFT팀장	· 당사 공정거래 준수 관련 업무 총괄 책임
TFT책임자	· 당사 공정거래 준수 관련 업무 총괄 진행
TFT담당	· 당사 공정거래 준수 관련 실무 담당



* 자율준수 관리조직 변경 사항 (2021. 3월)

- IT전략팀 조직 폐지에 따른 담당 변경 (정보화전략팀)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괄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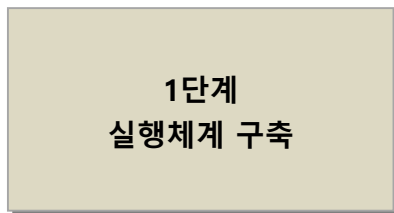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 개요

1.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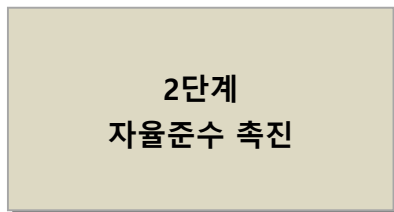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또는 CP)란 기업활동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일체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함

2.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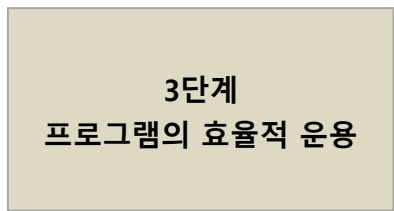
실행체계의 구축, 자율준수의 촉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 및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 등 3단계로 나누어 실행됨



- 최고경영자에 의한 자율준수방침 천명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 자율준수편람 제작
- 자율준수교육 실시
- 자율준수 이행상황 감시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문서관리
-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 절차 및 제도 개선
- 경쟁당국과의 협력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괄

02

도입의 필요성

시대적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근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른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질서 준수는 필수적 요구사항
대외신인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투명경영·윤리경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고객, 이해관계자 및 사회의 신뢰 확보
기업손실 사전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등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 필수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회사의 자율준수 노력 소명, 판단 기준 및 양형 근거로 활용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괄

03

8대 핵심 요소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기업 내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 표명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전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함

-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을 통해 자율준수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 사내 게시 및 이메일을 통해 모든 종업원에게 최고경영자의 메시지를 전달
- 사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메시지를 표명
- 임직원이 서면 자율준수 메시지에 서명

**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9. 10. 22)*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괄

03

8대 핵심 요소

[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프로그램의 설계, 임직원에 대한 인식 고취, 운영조직의 관리,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자율준수활동 감시 등을 관장하는 핵심축이 되어야 함

-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한 선임 및 CP 운영 책임 부여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사실 공식화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
-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사건처리를 주관하며 경쟁당국과 공식적 대화채널의 역할 수행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 활용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
- 최신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며, 업무환경 및 법규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
- 해도 좋은 것(Dos)과 해서는 안 되는 것(Don'ts)을 명확히 제시
-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전자파일등 형태로 제작

**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9. 10. 22)*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괄

03

8대 핵심 요소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임직원들이 담당 업무에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정거래 법규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내에 자율준수풍토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

-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를 위해 감사(audit), 심사(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합리적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시 및 감사 시스템 구축하여 운용

- 감사 : 공정거래 관련 문제소지가 있는 행위를 발견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율준수 관리자가 실시하는 정밀조사시스템 (내부 사전점검)
- 심사 : 특정한 거래행위, 계약 등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자율준수관리자가 사전에 검토·분석하는 시스템
- 보고 : 법 위반사실 등 각종 정보를 내부감사인 또는 경영층에 보고하는 시스템(System, Process 수정·보완)
- 임직원이 법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채널을 마련하고, 이 경우 신분상 보복위험이 없도록 내부제보자 보호시스템 구축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괄

03

8대 핵심 요소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법 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 강구

- 공정거래 법규 위반 책임 임직원에게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 마련·운용
-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 대응 및 추후 유사 행위 재발 예방

[8] CP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P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 후 그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

**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9. 10. 22)*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01

부당지원행위 vs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제대상	사업자 일반	대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집단 또는 총수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
조항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3조의2항
지원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사에 한정하지 않음)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규제목적	공정거래저해성(특히 경쟁제한성)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제내용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일감몰아주기) ② 통행세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거래 및 자산·상품·용역, 인력 거래 ② 사업기회의 제공 ③ 현금 및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④ 합리적인 고려 또는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일감몰아주기)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01

부당지원행위 vs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안전지대	<p>①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 범위 지원 금액 5천만원 이하 적용 제외</p>	<p>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상품/용역의 경우 200억 원)</p> <p>② 상당한 규모의 거래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이 12% 미만인 경우 (단,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p>
위반 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 부과 • 과징금 부과 : 직전 3개 사업 년도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 또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 원 이내 과징금 부과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2020. 9.10)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02

일반부당지원행위의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

지원주체 (지원을 해주는 회사) 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서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03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함

-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부당성 판단기준 :
 -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
 -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
 -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다른 사업자의 신규시장 진입 저해
 -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
 - 공정거래 저해 우려는 실제 구체적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및 나타날 가능성 큰 경우, 현재 효과가 미비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포함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거래상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인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부정되지는 않음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04

자금지원행위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정상금리: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간의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 실제 적용금리와 정상금리(개별/일반 정상금리) 차이가 7% 미만이고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유형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 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 출자의 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상
유의사항
Do

-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의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함
- 지원금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함 (단, 상품/용역거래는 부가가치세 제외)

<거래유형별 거래금액 세부산정 기준>

-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는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으로 산정
 - 부동산 임대차 거래 : 거래금액 = 연간임대료 + 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 × 이자율*) (관리비는 제외)
 -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2.5% 적용
 - 상품/용역거래 :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매입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
 - 담보제공 : 담보한도액으로 적용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실제 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의 차이가 10% 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
-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금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야 함

정상가격 산출방법 (순차적으로 적용)

- ①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② 유사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③ 동일 유사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심결례

지원 금액 산정 시 정상금리 적용 기준 관련 사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사실관계]

A사가 B은행으로부터 621억원을 차입. 원고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예금 600억원과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A사가 B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인 5.50~5.87%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자금지원이 있었음.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거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B은행이 A사 또는 A사와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위 실제 적용된 금리와 일반정상금리인 6.83~7.07%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05

자산지원행위

정상가격(시가)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심사지침)

정상가격 산출방법 산정기준

-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가격
-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
- ③ 유사사례 없는 경우 거래당시 경제 경영상황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할 현실적 가격

업무상 유의사항 Do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조건은 비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조건과 비교
- 상품/용역 거래 시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가격을 산정 및 기록 관리해야 함
- 계열사 지원 시 지원주체에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함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여서는 안됨
- 계열사에 무료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됨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률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됨

*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2020. 9.10)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06

상품 및 용역지원행위

상품, 용역거래의 경우, 지원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 상품, 용역거래의 경우,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유형

-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지원주체가 광고 판매수익을 창출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게 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계약상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면제하여 주는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통하여 소모품 등을 구입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매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지원 객체로 하여금 과다한 유통 차익을 얻게 한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주체와의 거래를 통하여 다른 경쟁사업자와 비교하여 상품·용역의 내용·품질 등 거래조건이 유사함에도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실현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서의 거래 가격
-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 적용
-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07

인력지원 행위

“정상급여”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 :
 -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때 :
 -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한다(매출규모에 따라 안분)
 - 다만, 인력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다.

유형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를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 총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업무상
유의사항
Do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해야 함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계열사의 인건비를 무상으로 부담하여서는 안됨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08

물량 몰아주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형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거래하는 행위

업무상 유의사항 Do

- 계열사와 거래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
 - 수의계약은 보안성, 긴급성, 효율성이 있어야 함
 -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정상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정가격에 따름
- (*정상가격 : 당사가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의 가격)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부당하게 계열사 및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함으로써 계열사 및 자회사를 지원해서는 안됨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됨
- 계열사에게 업무의 대부분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주어서는 안됨
- 계열사간 거래물량의 확보로 사업의 위험성이 제거되는 거래를 해서는 안됨
- 계열사간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더라도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어서는 안됨
-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어서는 안됨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09

통행세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원행위 판단기준

- 정상적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 이례적인 거래행태인지 여부
-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비하여 불리한 조건의 거래방식인지 여부
- 불필요한 유통비를 추가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의 직거래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정상가격 산정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 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 지원주체와 다른 사업자 간의 직거래 가격이 정상가격
- 지원주체, 지원객체, 다른 사업자가 모두 계열관계인 경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해당계열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

유형

-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가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유형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
- 회사가 거래상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그 대가를 과도하게 지급받는 유형

**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2020. 9.10)*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09

통행세

업무상
유의사항
Do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 사전 확인해야 함
-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이 입증되어야 함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은 후 발생한 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함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거래 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음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추가시켜 수익을 귀속시키게 하여서는 안됨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사항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의 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였는가?
자산 및 상품 등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처리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 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였는가?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사항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사에 대하여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인력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지원을 위한 인력 제공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회수 하였는가?
물량 몰아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였는가?
통행세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가?

임직원용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도입 (계약 시)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 규제 Compliance Checklist (임직원용)

당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제 7 호(부당지원행위) 및 제 23 조의 2 제 1 항(사익편취)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롯데그룹의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완료한 후, 법무컴플라이언스담당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일반 검토 사항

	체크 포인트	예	아니오
1	해당 계열회사와 최초로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인가?		
2	해당 계열회사와 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는가?		
3	해당 계열회사와 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사내 법무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4	해당 계열회사의 (예상) 거래액 규모는 10억원을 초과하는가?		
5	해당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위한 내부 통의를 진행하였는가?		
6	해당 계열회사의 거래처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인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의 답이 (예)인 경우 → 8 ~ 10 사항을 확인한 다음 16 이하의 사항을 계속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의 답이 (아니오)인 경우 → 11 ~ 15 사항을 확인한 다음 16 이하의 사항을 계속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8	해당 입찰에 비계열회사도 참여하였는가?		
9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골정하게 해당 계열회사를 최우선순위업체로 선정하였는가?		
10	해당 입찰 관련 자료는 부서 내에서 안전하게 보관하였는가?		
11	해당 계열회사와 경쟁 입찰이 아닌 방식(예: 수의계약)으로 거래하는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가?		

	예	아니오
이유나 근거(예: 효율성, 보안 등)?		
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영업비밀이나 정보의 유출로 인한 거래 불가피		
전에 비계열회사와 거래하는 하였는가?		
전에 해당 계열회사가 다른 다른 경우의 거래조건(예: 가격)		
사와 거래할 경우와 비교하여?		
는 경우, 정기적으로 해당 계열 관하여 검토하였는가?		
위하여 해당 계열회사를 중간 가?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의 답이 (아니오)인 경우 → 다음 '개별 거래 검토 사항'을 계속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9	해당 계열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예: 해당 계열회사의 추가로 인한 거래비용의 인하 등)가 존재하는가?		
20	해당 계열회사는 거래 단계 추가에 따른 이익(예: 재판매에 따른 마진, 수수료)을 취득하는가?		
21	해당 계열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지 않고 당사와 다른 제3의 회사가 거래할 수 있는가?		

Q & A

질문

- 사업의 특성상 극비의 보안을 요하며 해당 공사 경험을 가진 경쟁력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발주처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으나 보안 및 기술문제로 당사와 동일한 의사를 갖고 있음) 관련 법령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경쟁입찰이 필수 조건인지)

답변

-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는 아니나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내부거래의 경우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그 계약의 방법도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여 수의계약시 그 정당한 사유(보안성, 긴급성, 효율성)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질문

- 상품/용역거래란 어떤 거래를 의미하는가? (상품/용역거래의 범위)

답변

-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말함

질문

- 행정상의 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위해 계열회사와 상품/용역 등의 거래 시 합당한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에도 '상당한 규모' 여부에 따라 제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당한 규모라는 것은 어떠한 수준을 의미하는가?

답변

- 비록 합당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물량을 몰아 줄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임
- 상당한 규모 해당여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려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하거나 영향을 크게 받을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Q & A

질문

- 계열회사(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답변

- 법에 근거하여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수의계약에 의한 물량이 많거나 그 낙찰율이 경쟁에 의한 낙찰율 보다 높을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음
- 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될 될 우려가 적음

질문

- 계열사와의 거래를 위해서는 부당지원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가? 수의계약만으로 충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 계열사와의 거래 시 경쟁입찰이 필수는 아니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고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비교해 가격 등 거래조건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게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질문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하는가?

답변

-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지원객체로부터 대가로 받은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지원행위 요건(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것)과 (2) 부당성 요건(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두 가지 요건 중 지원행위 요건의 결과인 지원금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

Q & A

질문

- 정상가격이라도 상당한 규모의 물량에 대한 계열사 간의 거래의 경우 부당지원에 해당되는가?

답변

-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및 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함

질문

- 행정상의 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위해 계열회사와 거래 시 합당한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에도 '상당한 규모' 여부에 따라 제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당한 규모라는 것은 어떠한 수준을 의미하는가?

답변

-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 또는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계열사의 물량을 확대한 것 자체만으로 "계열사를 위한 차별행위"로 보기 곤란함
- 그러나, 계열사의 제품 또는 제품의 가격·품질·거래조건 등이 비계열회사 것에 비해 상당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비계열회사와의 거래 물량을 상당히 축소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단순히 계열사 물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소지가 낮음

4.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4.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01

개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대규모내부거래(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및 상품/용역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2)
- 상장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
-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위반 시에는 미 공시 및 허위공시 해당 사업자의 경우 1억 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동일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혹은 그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를 상대로 분기 50억 원 (또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상의 상품/용역거래(매입/매출합산)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 함

02

주요 유형

자금 거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유가증권 거래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포함)

자산 거래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 및 부동산 임대차거래 등 포함)

상품·용역 거래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상적 거래

4.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03

유형별 공시 내용 및 기준

구분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상품·용역 거래
거래금액 산정 기준	<p>실제 거래하는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임대차 : 연간임대료 + 환산 연간임대료 (=보증금×이자율) ※ 관리비 제외 담보제공 : 담보한도액 보험계약 : 보험료총액 	<p>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p>
거래 상대방	<p>특수관계인 (계열사, 동일인/친인척 등)</p> <p>- 계열사 사이의 자금차입대여 거래, 상품 /용역거래 등을 하는 것은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공시의무 발생</p>	<p>동일인 및 그 친족의 지분이 20% 이 상인 계열사 또는 그 회사가 50% 이 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해당하는 자손자 증손회사 (2020. 7. 1. 시행령 개정)와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 하는 행위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발생</p>
거래규모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 or 50억원 이상	
이사회 의결	거래 시작 전	거래 시작 전
	건별	건별 (단 이사회 의결 전 내용 미확정 시,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
공시 시기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	
재의결/ 재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목적, 대상 및 거래상대방 변경 - 거래금액의 20% 이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금액의 20% 이상 증가 - 20% 이상 감소 시 재의결 없이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재 공시

4.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04

위반 시 제재조치 (2020. 6.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위반행위 별 과태료 기본금액

위반 사항				기본금액(만원)
이사회 의결여부	공시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공시사항 누락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2,000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 최대 2,000만원)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 최대 5,000만원)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5,00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	누락 또는 허위공시 한 경우	7,000
가중조정 사유 및 비율		• 공시의무를 회피하게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 사업자별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가중		

4.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04

위반 시 제재조치

-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 별 거래금액에 따라 비율을 곱하여 산정

거래금액	적용비율(%)
100억원 이상	100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0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80
4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70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0
20억원 미만	50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다른 의결 및 공시대상거래에 대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등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 (공시규정 제4조⑤ 제1호)
- 채권/CP 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금융이나 카드결제

4.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05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2021년 8월 18일부 시행)

1. 대규모 내부거래의 일방 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개정 규정	기존	개정(2021년 8월 18일 시행)
제8조 (주요내용의 변경) 제1항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이사회 의결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그 상대방이 거래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의의

: 기존에는 상대방 B의 이사회 의결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이미 해당 대규모 내부거래가 공시되었더라도 A에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거래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함

2.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조항의 “일상적인 거래분야” 의미 명확화

개정 규정	기존	개정(2021년 8월 18일 시행)
제9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제1항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이하 "계열 금융회사"라 한다)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대규모 내부거래(이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모사채인수 등 특정 거래조건을 부기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이하 "계열 금융회사"라 한다)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대규모 내부거래(이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모사채인수 등 특정 거래조건을 부기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의의

: 기존에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 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이 면제 되었으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4.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05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2021년 8월 18일부 시행)

3. 계열 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의 일괄 의결 적용 범위 확대

개정 규정	기존	개정(2021년 8월 18일 시행)
제9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에 대한 특례) 제2항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당해 기간동안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내용에는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당해 기간동안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내용에는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의의

: 기존과 달리 금융 또는 보험사도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분야에서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할 경우에는 분기별 이사회 일괄 의결이 가능하게 됨

4.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06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 관련 질의응답 (Q&A)

질문

- 거래 당사자 중 한 회사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두 회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여야 하는지?

답변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회사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행위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관함
- 따라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발생한 거래 당사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면 됨

질문

-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 연장 없이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답변

- 만기가 도래한 발행어음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만기연장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 단,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금하지 않고 기간이 장기화되어 만기연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거래임을 유념하여야 함

질문

-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 출금하지 않고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답변

- 만기가 도래한 발행어음에 대해서 출금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질문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50억원 이상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답변

- 자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가 아니므로 출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는 없음

4.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06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 관련 질의응답 (Q&A)

질문

-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에서 자본총계와 자본금의 기준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총계와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답변

-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금을, 자본총계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질문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답변

- 변경계약은 새로운 거래에 해당되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1일 이내(비상장은 7일 이내)에 공시를 하여야 함

질문

- 부동산 매매행위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거래가 있는 경우, 추가거래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아도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당초 의결 및 공시한 행위와 추가로 발생한 행위 간에 거래 대상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거래대상이 동일할 경우(예 : 동일 토지의 거래금액만 변경) 추가 거래금액이 당초 거래금액보다 20% 이상 변동이 있다면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여야 하나, 거래대상이 다를 경우(예 : 당초 계약분 토지의 인접토지거래) 추가 거래는 당초 거래와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행위이므로 추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함

질문

- 영업권 양수도 계약 시 공시 양식은?

답변

- ‘특수관계인에게 영업양도’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 양식에 공시

4.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07

거래금액 산정 관련 질의응답 (Q&A)

질문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이 하루에 발생하는 총 거래금액인지 아니면 1회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금액인지의 여부?

답변

- 거래금액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1회의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 금액
- 주식 거래의 경우 1회 거래라는 개념이 모호하므로 1일 매입 또는 매도 금액의 총합계를 1회 거래로 봄

질문

- 금융기관과의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의 기준이 입/출금 금액의 합산인가? 아니면 입금액인가?

답변

-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입금액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임
- 일정한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출금은 대상이 아님

질문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거래대상과의 거래를 수 차례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처리 관계는?

답변

- 동일 거래대상과의 동일목적의 거래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외부회피를 목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 등을 통하여 적발되면 불성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되어 과태료 등 부과될 수 있음

4.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08

상품용역 관련 질의응답 (Q&A)

질문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인 상품·용역거래의 거래금액은 매출액만 포함되는가?

답변

- 동일인 및 동일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상품용역거래의 거래 금액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임
- 매출액과 매입액 인식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름
-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

질문

- 9월 30일 당해연도 4분기 상품/용역거래(거래금액 50억원)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였으나, 분기 중 거래금액이 7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는?

답변

- 거래금액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주요내용 변경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
- 이미 공시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당해 분기 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1일 이내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질문

- 9월 30일 당해연도 4분기 상품/용역거래(거래금액 50억원)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였으나 분기 결산 결과 거래금액이 20억 원인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는?

답변

-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요내용의 변경에 해당되지만 상품 및 용역거래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은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하여야 함

4.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08

상품용역 관련 질의응답 (Q&A)

질문

- 상품/용역에 대한 거래금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답변

-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질문

-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는 상품 및 용역거래인지 자산거래인지?

답변

- 콘도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콘도 및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는 행위는 상품 및 용역거래
-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다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는 자산거래

질문

- 상품/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향후 1년간의 거래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한 경우 별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지?

답변

- 상품/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분기별 사전공시가 원칙이므로 이미 향후 1년간의 거래기간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였더라도 별도로 계약 체결방식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
- 또한 분기 중 주요내용 변경 공시(거래금액 20% 이상 증가 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 별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
- 다만, 분기 전 사전공시를 하였으나 거래금액 20% 이상 감소로 인해 주요내용 변경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 별로 계약체결방식을 기재할 필요는 없음(거래 금액 감소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점을 감안)

5. 불공정거래행위 유의사항

5. 불공정거래행위 유의사항

0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02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1.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기준

경쟁 제한성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
불공정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함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

2. 불공정거래행위 요건

부당하게	특정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불공정성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불공정성의 효과보다 큰 경우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염매 등에 대해서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주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입증할 책임을 부담

5. 불공정거래행위 유의사항

03

불공정거래행위 주요 유형

•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 거래상지위남용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사업활동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5. 불공정거래행위 유의사항 (협력업체 대상)

04 경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

협력업체에 대해 당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경우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행위, 협력업체에게 당사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사가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제한하는 것을 포함함

05 금지 이유

협력업체와 거래 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시킬 경우,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 자신의 독점력을 강화, 유지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파트너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 체결 시 당사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경우

5. 불공정거래행위 유의사항 (협력업체 대상)

06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제23조제1항 제4호)

- 협력업체(공급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협력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됨

07

금지 이유

협력업체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협력업체는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되며, 반대로 행위자가 이익을 받게 된다면 경쟁여건 면에서 그의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결국 자유경쟁의 기반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납품업체/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하기 예시 참조)
 - 협력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내용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
 - 그러면서 납품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규정
 - 대금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은 면제
 -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서상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의 내규를 따르도록 규정
 - 재판관할법원을 일률적으로 자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
 -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를 위한 목적의 공급물량감축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

5. 불공정거래행위 유의사항 (협력업체 대상)

08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 제1호)

- 특정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할 경우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부당하게 협력업체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함
 - 거래조건 차별(이행방법이나 대금의 결제조건 차별 등)
 - 거래조건에는 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 등이 포함됨

09

금지 이유

다른 제조업자 제품의 취급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달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유리한 차별을 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고 불리한 차별을 당하는 사업자는 경쟁상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기 때문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품공급비중에 따라 어음지급기간 등 대금결제비중을 달리하는 행위
 - ※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차별이 현저해야 함
 - ※ 전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할 수 있음

5. 불공정거래행위 유의사항 (협력업체 대상)

10 거래중단 시 주의사항

- 거래중단에 따르는 명확한 사유(납기지연, 부정 연루 등)가 있어야 함
- 부정의 증거가 명확한 경우 이를 반영해 업체를 정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명확한 증빙을 추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거래중단이 예상되는 업체는 6개월 전에 거래중단을 알리는 경고성 문서를 발송하고, 거래중단 예정 3개월 전에 정식으로 거래중단을 알리는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
- 거래중단 대상인 협력회사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

11 거래거절 시 주의사항

- 거래처 또는 물품구입처와의 사이에서 거래조건이 타협되지 않고 거래의 신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다음 점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함
-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이유를 정확히 전하고, 거래할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존해 두어야 함
- 경쟁사와 거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물량을 축소해서는 안됨
- 사전 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해서는 안됨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중단을 하여서는 안됨

12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
- 과징금 : 법 위반 관련매출액의 4%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 이내
(2021.12.30부)
-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 불공정거래행위 유의사항 (계열사를 위한 차별)

유형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계열사 차별취급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계열회사와 다른 거래상대방을 현저하게 차별하는 행위 (상품/용역을 통한 부당지원행위)
- 자금·자산·인력의 부당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경제력 집중 억제 성격도 있지만,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가리지 않는 자금·자산·인력의 부당지원 행위와는 달리 오로지 계열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별행위의 동기, 효과의 귀속주체,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인정될 수 있음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제품의 품질이나 거래기간, 거래물량 등의 합리적 차이가 없음에도 비계열회사보다 계열회사에 저가로 판매하거나 부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 비계열회사보다 계열회사에게 납품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행위
- 자기 계열사로부터는 어음으로 대금을 수령하면서 비계열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 특정상품을 구입/공급함에 있어서 사규, 공문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게는 비계열회사보다 어음기간을 짧게 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금결제를 유리하게 하는 행위

5. 불공정거래행위 유의사항 (거래강제 - 끼워팔기)

13

거래강제 - 끼워팔기

의의

거래상 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유형

-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용역과 종된 상품/용역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용역을 공급하게 할 수 있음
- 끼워팔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함

유의사항

- 끼워팔기는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이 문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쟁저해성의 입증을 요하지 않음

5. 불공정거래행위 유의사항 (거래강제 - 사원판매)

의의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사원판매행위의 위법성 요건

- ①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할 것
- ②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할 것
- ③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여야 할 것
- ④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유형

- 목표량 미달 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가하거나 판매목표 미달분을 억지로 구입하게 하거나 목표달성여부를 고용관계의 존속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결부시키는 경우
- 임직원에게 판매목표를 개인별로 설정한 후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업담당 임원이나 최고경영층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

- 목표량 달성 시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임직원의 판단에 따라 목표량미달과 각종 이익 중에서 선택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임직원에게 불이익(사실상 불이익 포함)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회사 상품(또는 용역)의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단순 촉구하는 행위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자기의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의 상품/용역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판매독려를 하는 경우끼워팔기는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문제삼기 때문에 공정위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경쟁저해성의 입증을 요하지 않음

5. 불공정거래행위 유의사항 (거래강제 - 기타)

의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유형

- 공급량이나 구입량의 축소
- 대금지급의 지연, 거래의 중단 또는 미 개시
- 판매장려금 축소
- 거래강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명시적/묵시적 강요, 직접적/간접적 강요 포함)
- 거래강제는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가 없어도 성립 가능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사업자가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유의사항

-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여 반드시 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5. 불공정거래행위 유의사항 (거래상 지위남용)

이익 제공 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 계열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유의사항

- 거래상 지위가 있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단순한 요청을 하여도 거래상대방은 거래를 강제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음

판매목표 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 판매목표의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야 함
※ 판매량의 할당행위 등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사항
이익제공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에게 계열사 제품을 판매하고 납품대금이나 하도급 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불이익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또는 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는가? •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지? • 자기의 필요에 의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거래처로 하여금 판촉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 • 자기의 연구비용, 직원 야유회 비용 등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경우
경영간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가 타 거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지? • 임직원의 선임·해임·변경 등에 대하여 자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지?
부당염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지는 않는가?
부당 고가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상당한 고가로 구입하지는 않는가?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사항
계열사 차별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회사와 비 계열회사에게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가? • 계열회사와 비 계열회사간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결정하지는 않는가? •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내용을 배제토록 하지는 않는가? • 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비계열회사에 대한 대금(지불) 수취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그 내용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가? • 거래물량 배분 시 비 계열회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있지는 않는가? • 납품물량 배분 시 계열회사와 비 계열회사간 차별적 취급은 없는가? • 계열회사에게는 저가로, 비 계열회사에게는 고가로 판매하는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는가? • 채무관리를 목적으로 계열회사와 비 계열회사로 차별적 취급을 유도하는 지침을 내리지는 않는가?
부당인력채용 기술부당이용 거래처 이전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채용하지는 않는가? • 경쟁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습득하여 이용하지는 않는가? • 상대방의 거래선 변경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임직원용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도입 (연2회)

PRIVILEGED & CONFIDENTIAL

불공정거래행위

※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아니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No.	체크 포인트	예	아니오
2.1	경쟁사와 공동으로 특정 파트너사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수량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가?		
2.2	기존의 파트너사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및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가?		
2.3	특정 파트너사에 대하여 가격, 거래조건(수량, 품질)을 다른 사업자와 다르게 결정한 사실이 있는가? (운송비용이나 판매비용의 차이 등에 기인한 미세한 거래조건 차이는 제외)		
2.4	경쟁사와 거래하는 파트너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지급 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에 대한 납품을 제한하거나 탈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는가?		
2.5	탈사의 상품과 경쟁사의 상품/서비스를 비교하여 탈사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가 현저히 우량하거나, 경쟁사의 상품/서비스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취지로 경쟁사와 거래하는 파트너사를 유인한 사례가 있는가?		
2.6	파트너사에게 탈사가 직매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경우가 있는가?		
2.7	거래 상대방의 임직원 선임/해임에 관여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 등의 결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제한한 사실이 있는가?		
2.8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의 조건으로 탈사 또는 본인의 부서에게 금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는가?		
2.9	파트너사와 체결한 상품판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탈초 계약내용의 주요 사항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가?		
2.10	거래시 거래(계약)의 조건으로써 탈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가?		
2.11	최근 경쟁사의 인력을 채용한 사실이 있는가?		
2.12	다른 사업자(파트너사 등)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2.13	탈사의 기존 파트너사 중 경쟁사로 거래를 옮긴 파트너사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처에게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는가?		

6.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6.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01

공동행위의 성립

의의

- 2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것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이라고도 함

공동행위 성립

• 2 이상 사업자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2 이상의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야 함
-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경우 예외

예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

예2)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식 소유 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 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합의의 존재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간에 공동행위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 합의는 일정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음
-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의 합의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

6.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01

공동행위의 성립

공동행위 성립

• 합의의 추정

- 사업자간의 합의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을지라도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합의한 것으로 추정함
 - ①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④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행위가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함

유형

- 건설회사 입찰 담당자들이 사전에 모여 공공건물 신축공사입찰에서 A사가 낙찰을 받도록 A사는 100억 원 미만의 금액으로 입찰하고, A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모두 100억 원 이상 가격으로 입찰하기로 약속하였음
- 이후 B회사 입찰 담당자가 겉으로만 위와 같이 합의하고 그 후 실제 80억 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

6.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01

공동행위의 성립 (합의의 추정)

구분	유형별 (예시)
① 직·간접적 의사연락/ 정보교환과 같은 증거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 특정기업이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 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주시한 후 그 반응에 따라 가격 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을 단행한 경우
②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 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 인정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③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 일치를 시장 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회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④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 없이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6.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01 공동행위의 성립 (합의의 추정)

사적 만남 및 정보교환을 통한 합의 추정

- 2 이상의 사업자간의 만남(의사의 접촉이나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은 가격 등의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률상 합의가 추정되도록 하였음
 - 정보의 내용(가격, 공급량, 비용), 정보의 신규성, 정보교환의 주기, 정보의 구체성, 개별성 등을 검토
 - 가격인상 합의는 일련의 연락이나 교섭을 통해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임
 - 가격 형성, 인상 기준이나 방법의 결정, 인상 시기/품목/수준의 조정이나 통일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짐. 따라서 경쟁사업자들의 연락이나 교섭이 이러한 가격인상 과정에 영향을 미쳐 공동보조나 행동통일을 초래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 가격인상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경쟁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소위 '정보교환'은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 교환시점과 범위, 교환주체나 방식 등에 따라 합의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쟁사업자간의 가격정보의 교환은 담합을 촉진시키거나 담합의 이행을 용이 하게 한다는 점에서 명시적 담합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교환되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비밀(Confidential)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내용과 같은 정보인 경우 이는 합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보교환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보교환의 시점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가격인상을 확정하기 이전 단계이거나
 - 일부 관련 사업자 사이에 은밀히 폐쇄적으로 교환되는 경우이거나, 정보교환이 지점 등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직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가격결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명시적인 담합행위의 하나로 봄

6.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02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는 그 개별적인 합의들의 기본원칙을 담거나 토대가 되는 기본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또는 개별합의 들이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절됨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
 - 예시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그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의 합의를 계속 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임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 또는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 예시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그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의 합의를 계속 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임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 또는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
 -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 :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이 위반행위의 개시일
 - 합의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자별 실행개시일이 위반행위의 개시일
-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
 - 합의에 정해진 조건/기한이 있는 경우로서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 공동행위의 구성사업자가 합의 탈퇴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실제 그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공동행위가 심의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심의 일에 그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봄

6.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02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

- **예시1)** 합의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가격인하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합의 탈퇴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공동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예시2)** 합의에 참가한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경우 그 독자적인 가격 결정일을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로 봄
- **예시3)**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이 있는 등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의 마지막 날에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봄

03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유형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운송비 공동결정 등)
- 과당경쟁금지, 정보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행위
 -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함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6.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03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유형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2호)

- 대금지급 방법 또는 거래조건을 제한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행위
- 상품인도일로부터 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정하거나 어음의 만기일 등을 정하는 행위
- 경쟁자와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 제품 출하장려금 요율, 판매장려금 요율 등을 공동으로 인하 또는 인상한 경우
- 무료긴급출동서비스를 공동으로 폐지한 경우
 - '거래조건'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거래의 장소, 거래의 방법,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함
 -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이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을 의미함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 별로 할당하는 행위 포함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 출고,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포함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포함
-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포함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5호)

6.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03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유형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6호)
 -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7호)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이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9.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6.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04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예방 가이드라인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 경쟁사와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 약정 또는 합의를 하는 것
- 여기서 합의는 명시적인 서면 합의 외에 전화나 모임을 통한 구두 합의는 물론, 상호간의 암묵(묵시)적인 합의도 금지됨
- 가격조건 및 거래/지급조건(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 제품, 용역 공급업체들로부터의 가격인상 요청에 대하여 구입자들이 합의하여 가격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거나 인상폭을 정하는 것)에 대한 경쟁사와의 합의는 명백한 위법사항임
- 특정한 가격이나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물론이고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 유지 등과 같은 일반적인 합의도 위법함
- 판매가격외에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거래조건, 거래지역, 상품의 종류나 규격, 상품출시 여부 및 시기, 입찰 참가 여부 및 금액도 합의 금지 대상에 포함
- 상품의 영업·판매정책 또는 구체적인 판매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합의하는 행위

6.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04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예방 가이드라인

경쟁사와 정보 교환 시 가이드라인

- 각종 서비스료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말 것
 - 팩스, 이메일은 물론 전화통화 등 일체의 수단이 포함됨
 -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초안 또는 결정(안) 등을 보여주거나, 주고 받는 행위도 포함됨
- 경쟁사에게 향후 마케팅 계획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말 것
- 경쟁사로부터 위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길 것
-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사자료나 거래처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한 경우 그 입수경위와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둘 것
- 경쟁사 관련 정보를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경우에도 이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시장 상황, 고객 수요 및 비용 등 다양한 경쟁적 소요를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할 것

6.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04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예방 가이드라인

경쟁사 모임 관련 가이드라인

- 경쟁사 임원과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제의 또는 수락하지 말고, 참석하지 말 것
- 특히 업계 담당자간의 모임 등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논의될 수 있는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은 절대적으로 피할 것
- 어떠한 명목으로든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협회 등 업계간 또는 경쟁사와의 공식적인 모임, 우연하거나 비공식적인 만남을 포함하여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①이의를 제기하고 ②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리를 이탈하여야 하며, 해당부서 책임자, 공정거래 자율준수담당자를 통하여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할 것
- 공식적인 모임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리를 떠난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회사 내부 기록에 남겨 놓을 것

6.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04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예방 가이드라인

문서작성 및 정보보완 관련 가이드라인

-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문서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할 것
- 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의 사용에 주의할 것

<표현 예시>

동업사 협력 강화, 업계공동대응(예정)

업계차원의 검토, 타사와 정보 공유

업계간 공조, 협조 체계, 당사와 지역. 타사 지역

- 문서 작성시 경쟁사 자료/정보를 인용하는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할 것
- 문서규정의 보존기간을 준수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의 메일, 기록, 메모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말 것
- 회사의 중요정보는 주관부서에서 자체 관리 및 정보보안을 철저히 하고 담당자 외 보관하지 않도록 할 것
- 회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를 회의 등의 사유로 배포 시 회의 종료 후 필히 회수하고 메일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을 지양함

6.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05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

- 리니언시(Leniency)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
- 첫 번째 자진 신고자(1순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완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자진 신고자(2순위)는 과징금 감경(50%) 및 시정조치를 감경 받을 수 있음
-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제도는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도록 하는 제도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 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이를 제출하여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 감면신청 접수처>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 전자우편 : Leniency@korea.kr
- 팩스 : 044-200-4444
- 문의처 : 카르텔총괄과 044-200-4535

6.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06

형사 리니언시 운영 (2020.12.10부 시행)

- 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리니언시 제도로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리니언시 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경성담합, 형법상 입찰방해행위와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담합을 포함함
- 첫 번째 자진 신고자(1순위)는 검찰로부터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자진 신고자(2순위)는 검찰의 구형을 감경(50%) 받을 수 있음
- 상기 형사 리니언시 순위는 공정위 리니언시 순위와 무관하게 검찰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공정위 리니언시 1,2순위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리니언시 신청 시 공정위 외 대검찰청에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 형사 리니언시에 의하여 카르텔에 대한 형벌감면 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형벌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방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 외에 '임직원 개인(퇴직자 포함)'도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
- 담합사건에 관하여 공정위 고발에 의존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검찰이 형사 리니언시를 통하여 자체 정보 수집 후 강제수사에 착수 할 가능성이 높아짐

<대검찰청 자진신고 감면신청 접수처>

- 전자우편 : leniency@spo.go.kr
- 팩스 : 02-3480-2589
- 문의처 :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지원과 (02-3480-2220)

임직원용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도입 (연2회)

부담감들행위

※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아니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No.	체크 포인트	예	아니오
1.1	공적, 사적 모임을 불문하고 경쟁사의 임직원과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가지는 모임이 있는가?		
1.2	경쟁사 임직원과 이메일,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가?		
1.3	경쟁사 임직원과 접촉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1.4	경쟁사 임직원과 접촉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사전 보고를 진행하는가?		
1.5	경쟁사 임직원과 접촉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사후 보고를 진행하는가?		
1.6	경쟁사와 단가, 마진, 거래조건, 서비스 지표, 주문량, 취급고, 사업계획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연락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는가?		
1.7	경쟁사로부터 [1.6]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문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1.8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경쟁사와 연락하여 정보를 교환한 사례가 있는가? ① 상품/서비스의 사업관련 정보(판매, 마케팅 계획 등) ② 상품/서비스의 가격관련 정보(단가, 마진, 수수료 책정, 수수료 변동, 비용, 마진 등) ③ 상품/서비스의 고객, 공급업체, 경쟁업체 관련 정보 ④ 상품/서비스의 판매관련 정보(판매지역, 판매규모, 판매조건 등)	(해당 번호 모두 기재)	
1.9	경쟁사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내부 보고자료, 비공식적 문서, 개인일지 기타 일체의 문서에 이를 기록한 사례가 있는가?		
1.10	담당 제품의 판매가격 등 사업활동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결정의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로 보관하는가?		

경쟁사 임직원 contact 레포트 (사전, 사후)

경쟁사 Contact Report (사전)

작성자	(부서명) / (성명)	
Contact 방식	(대면미팅/회사이메일/개인이메일/회사전화/휴대전화/SNS 등)	
일시	(YYYY/MM/DD)	
장소	(대면미팅일 경우 장소 기재)	
상대방	(회사명/이름/직책/연락처/이메일주소 등)	
고객 동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N) ▪ (Y 일 경우) 	
Contact	이름/목적	▪ (Contact 상
내용	논의사항	▪ (Contact 예

※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구체

경쟁사 Contact Report (사후)

작성자	(부서명) / (성명)	
Contact 방식	(대면미팅/회사이메일/개인이메일/회사전화/휴대전화/SNS 등)	
일시	(YYYY/MM/DD)	
장소	(대면미팅일 경우 장소 기재)	
상대방	(회사명/이름/직책/연락처/이메일주소 등)	
고객 동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N) ▪ (Y 일 경우 어느 고객인지 회사명/이름/직책 기재) 	
Contact	이름/목적	▪ (Contact 상대방의 이름/목적 간략히 기재)
내용	논의사항	▪ (Contact 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 기재)
기타 특별사항 Check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사항에 관하여 논의한 경우 "Y"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상품/서비스 출시 정보 ➢ () 상품/서비스 가격, 가격책정 방법, 가격 변동시점 ➢ () 상품/서비스 생산량, 판매량 ➢ () 상품/서비스 비용, 마진 또는 할인 정보 ➢ () 상품/서비스의 시장점유율 ➢ () 판매 지역 정보 ➢ () 마케팅 정보 ➢ () 입찰 관련 정보(참가 여부, 입찰가격, 수주가격 등) ▪ ("Y" 표시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제공/수령 자료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N) ▪ (Y 일 경우 어떤 자료인지 설명 및 첨부)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1

약관의 의의

- 명칭이나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며, 계약의 표준화·정형화를 통해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고 편리하기 위한 것
- 고객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면책조항, 채무의 이행, 계약의 해지 등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위반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심의·의결 대상임

02

약관의 주요 특징

- 일방 당사자(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 (일반성)
-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것이어야 하므로,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개별적인 교섭(흥정)없이 일률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손으로 쓴 것도 약관(수기약관)에 해당되나 구술로만 계약한 것은 약관이 아님
-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이미 체결되었거나 장래 체결될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어야 함
-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함
 - 약관, 계약서, 약정서, 규정, 규약, 규칙, 회칙, 특별약관, 특약조항, 부가약관 등 명칭 불문
 - 계약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거나 별지로 되어 있거나 영업소나 출입구에 게시되거나 상관없으며, 약관이 소위 유일조항인지 다수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묻지 아니함
- 거래 당사자간 개별적인 교섭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야 함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3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VS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약관에 해당되는 경우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공공사업자의 전기·가스 공급규정 지방공단의 점포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이용료, 수수료 이익·로열티 배분 비율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조항 그 자체
금융/보험약관 병원, 주차장, 시설이용약관 분양/임대차계약서 대리점/가맹점계약서 운송약관 통신/인터넷서비스약관 게임약관	아파트·상가 등의 공동규약,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회사의 정관 등 단체의 내부 구성원간의 규율조항

04

불공정 약관의 효과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함(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함)

05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 ※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 사이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그 판단기준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비교하여 정함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6

면책조항의 금지 (약관규제법 제7조)

-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 조항
-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자(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약관에 의하여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법률상 책임이란 채무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의무위반 책임·불법행위 책임도 포함됨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에 대하여만 규정하므로 경과실인 경우의 면책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에 의하여 무효가 됨
- 위험의 분담은 채권의 목적이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급부 불능) 그로 인한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계약의 취지에 더 합리적인가 하는 고려에 따른 것임

**업무상
유의사항
Don't**

반영하지 말아야 할 조항

-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7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관규제법 제8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실손해의 산정이나 입증이 복잡하고 당사자간의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
-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중요한 목적은 채무불이행시 고액의 배상액을 지불토록 약정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
- 부당하게 과중한지의 여부는 거래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약관규제법상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

- 당사자가 약속한 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법원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약관에 의한 거래에서 그 불편이 매우 크므로 약관규제법상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무효로 규정한 것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지연손해의 배상, 전보배상, 위약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
-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며 일반적인 손해배상원칙에 따름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7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관규제법 제8조)

업무상
유의사항
Don't

반영하지 말아야 할 조항

- 임대보증금의 10%를 임차인의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
※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는 계약기간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 즉 임대료 총액이므로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함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하여 매도인 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 또는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별도로 연체료까지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 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8

계약의 해제/해지 (약관규제법 제9조)

- 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임에도 약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하는 사례가 빈번함
- 민법이나 기타 법률이 고객에게 부여한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임
- 법정해제/해지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약정해제/해지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업무상
유의사항
Don't

반영하지 말아야 할 조항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8

계약의 해제/해지(약관규제법 제9조)

업무상
유의사항
Don't

반영하지 말아야 할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고객의 해제/해지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에도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해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사업자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 시 고객이 사업자보다 먼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는 조항
-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음에도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일부만을 환불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이미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이자 및 연체료를 제외하고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금을 반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을 붙이는 조항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9

채무의 이행(약관규제법 제10조)

-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합의 및 판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음
- 급부는 사업자 자신이 제공하여야 할 급부와 고객이 제공하여야 할 급부를 모두 포함함
급부의 변경에는 약속한 급부의 수량, 성질, 이행시기나 이행장소의 변경, 급부제공의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됨
-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고객과의 협의가능성, 일방적인 변경가능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반영하지 말아야 할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채권자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 공급을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거래 특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타당한 제한사유를 정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자유재량권을 인정하여 일방적인 급부 변경권을 부여하는 조항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업무상
유의사항**
Don't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사표시의 의제 (약관규제법 제11~12조)

고객의 권익보호

- 고객이 직접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익을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상당한 이유 없이 권리 및 이익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임
- 기타의 권리는 항변권, 상계권 등에 준하여 공평의 원리에 기하여 부여되는 권리로서 유치권,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청구권, 채무충당지정권 등을 말함
-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의사표시의 의제

-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효과의사)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행위(표시행위)로서 법률 행위의 본질적인 요소
- 따라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의제하거나 의사표시의 도달을 의제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취지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사표시의 의제 (약관규제법 제11~12조)

업무상
유의사항
Don't

반영하지 말아야 할 조항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간이 존재하는 동안, 즉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함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고객의 채무불이행 시 사업자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고객이 아무런 이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을 박탈함이 타당함
-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함에도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사항
약관의 명시/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에게 약관내용을 계약 종류에 따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명시하였는가? • 고객이 약관의 사본을 요구할 때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는가? •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는가?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가?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는가?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조항이 있는가?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이 있는가? •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이 있는가? •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지를 통지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가?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임에도 재판의 승소·패소 여부나 패소비율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소송비용 일체 또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가?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사항
면책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가? •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 있는가? •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배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이 있는가? •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손해배상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는가?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별도로 연체료까지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는가?
계약의 해제/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는가?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가?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 있는가?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사항
계약의 해제/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는가? •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고객의 해제/해지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가? •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해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가? • 고객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사업자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가? •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 고객이 원상회복의무를 사업자보다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가? •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가?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음에도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일부만을 환불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가? •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이미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이자 및 연체료를 제외하고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가? • 계약이 해제/해지 되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금을 반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을 붙이는 조항이 있는가?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사항
채무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는가?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는가? • 채권자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 공급을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는가? •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타당한 제한사유를 정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자유재량권을 인정하여 일방적인 급부변경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는가?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는가?
고객의 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이 있는가?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 사업자가 업무 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가? •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객이 사업자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가? •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이 있는가? •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함에도,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가?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사항
의사표시의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는가?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있는가?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는가? • 의사표시기간의 부당한 장기화 등을 금하는 조항이 있는가? •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고객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는가? •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객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형·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가? • 사업자가 의사표시에 관하여 발신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거나, 연착이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고객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는가?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01 의의

- 기존 형법의 적용상 한계를 보완한 포괄적 부패방지법령으로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외에도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기관 임직원 등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뇌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처벌될 수 있음
- 2011년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이듬해 8월 입법, 2년 7개월 만인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었으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음
-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대해 직무관련성, 대가성의 요건이 필요하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과 관계없이 회당 100만원 또는 연간 누적으로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액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02 청탁금지법의 주요한 특징

청탁금지법은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부패방지 법령으로 통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종합적인 통제장치로 대상 범위, 처벌 요건, 양벌규정 유무 등에서 기존 형법과 다른 특징을 보임

구분	형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범위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기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까지 범위 확대
처벌 요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존재해야 형사적 제재 가능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불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초 과하면 형사적 제재 가능
양벌규정	양벌 규정 없음	양벌규정 있음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제재 가능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03 공직자의 범위 확대

- 종전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청렴과 투명성의 의무를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기관 임직원, 배우자에게까지 부과함

04 처벌요건

- 기존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기 곤란할 때는 처벌이 불가능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때에는 처벌할 수 있음

05 양벌 규정

-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음
- 단,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교육을 통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입증할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06 적용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 각 시·도 교육청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07

적용대상 기관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에서 확인 가능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O, 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신문,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및 기타 간행물 기관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법인/단체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08 위반 시 제재

금품 등 제공

-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하여 그 배우자가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함(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정한 청탁의 경우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처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탁의 경우 그 대가로 금전 등 제공이 없더라도 처벌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 3천 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는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며 과태료 부과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
- 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처벌 가능(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09 업무 시 주의사항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적용기준 (대가성 불문)

- 금품 등 수수금지의 핵심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이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될 수 있고, 100만원 이하 금품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때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됨

<직무관련성>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형법상 뇌물 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 즉,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도 포함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으며, 금품 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임

'동일인'의 의미

-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은 금품의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금품 등 제공의 경우 출처가 중요하므로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1회'의 의미

- 법적인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 가능
- 특히, 분할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소위 '쪼개기'의 경우 1회로 평가될 수 있음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

'금품 등'의 종류

- '금품 등':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및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함.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① 일반적 기준

- 금품 등의 가액은 제제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 및 과태료 부과액 산정을 위한 기준
- 행위 시(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
-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며 이를 모를 경우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단,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파악하며,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② 개별적 기준

- 납품·용역 기회 : 납품가액에서 원가를 공제한 이익 또는 실제 수수 용역대금에서 정당한 용역가액을 공제한 이익
- 향응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

<주의>

- 공직자가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향응(접대)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비용과 공직자의 접대비용을 합산하게 됨.
-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 수수한 금품은 금융이익 상당액(금융기관 대출이율/법정이율)이고, 현저히 저리로 차용한 경우는 대출이율이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액 상당액임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1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 목적 요건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한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됨

<목적 요건>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
- 따라서 가액 범위 이내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 제한
 - 조사 대상자나 불이익 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 기준 이하의 선물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 수수 등

<가액 한도>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 선물(5만원 이하, 단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에 한하여 10만원), 경조사비(5만원 이하, 단 화환, 조화의 경우 기준과 같이 10만원)는 예외 사유에 해당(2018. 1. 17. 개정법 시행)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2021.01.19) >

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에 대한 특례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해당기간 내 우편 발송 경우 포함) 경우 선물 가액범위를 20만원으로 한다. (2021.01.19 ~ 02.14)

-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단,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지 않고 제공자가 식당에서 먼저/나중에 결제하고 공직자 등만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없음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등
- 선물 :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적용 기준>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5만원이며 각각의 금품 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음식물과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하거나 경조사비와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각각의 금품 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1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
 -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고려하여 정당한 권원에서 제외 가능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 공식적인 행사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말함
 - 특히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공개성, 비용 부담,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 등을 의미함
 - 특히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률적”으로 제공
 -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반드시 모든 참석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 제공은 가능함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2

업무상 유의사항

식사 제공의 경우

- 공직자 등이 본인 비용을 부담한 경우,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특히 비용 부담에 주의하여야 함
- 식사 및 음주 등의 제공인 경우, 청탁금지법 상 허용 가능한 식사의 가액은 3만원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등의 이유로 제공되는 일반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주류 포함) 제공은 가능함
- 공직자등과 식사 시 더치페이는 가능함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함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중요한 사업상의 결정을 앞두고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3만원이 초과하는 식사 및 술을 제공하여서는 안됨
- 사업상의 이유로 사적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공직자에게 2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됨(뇌물로 판단될 수 있음)
- 공직자 등에게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위한 식사 제공을 하여서는 안됨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2

업무상 유의사항

선물제공의 경우

-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한 선물 비용의 가액은 5만원
- 공무원 윤리 강령에 부합하는 대가 없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가능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상징적 용도의 홍보용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
- 경연이나 추첨을 통하여 제공된 상품은 가능
- 공식적인 방문 시 회사의 로고나 명칭이 새겨진 장식품이나 사무용품, 달력, 일반 광고성격의 홍보 책자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
- 당사 로고가 찍힌 홍보용 USB 등 소액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에 한하여 10만원까지 상향 조정(2018년 개정)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입찰참여, 승인, 허가 등 민감한 시기에 선물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됨
- 특정인(공직자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빈번하게, 고가의 선물을 반복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 국가기관의 특정 부서에만 당사 기념품을 제공하여서는 안됨
- 특정인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런 표시 없이 견본품 형식으로 선물을 제공하여서는 안됨
- 중요한 사업상의 결정을 앞두고, 공직자 및 그 배우자에게 고가의 스포츠 경기 또는 문화 행사 티켓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됨
- 중요한 사업상의 결정을 앞두고, 공직자 및 배우자에게 스포츠 경기 또는 문화 행사를 함께 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서는 안됨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2

업무상 유의사항

금품제공(경조사)

-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경조사비 등은 지급 가능(5만원 이내, 화환, 조화의 경우 10만원 까지 가능)
-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조 차원에서 금품 제공은 가능
- 공직자 등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은 경우, 결혼식 축하를 위해 축의금으로 5만원 이내를 지급하는 경우는 가능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로차 개인 명의로 5만원 이내의 부의금을 제공한 경우는 가능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5만원이 초과하는 축의금·경조금을 제공하여서는 안됨
- 10만원이 초과하는 경조물품(화환, 조화)을 제공하여서는 안됨
- 부조금, 선물, 음식물의 합계가 5만원이 초과하여 제공하여서는 안됨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3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상 열거된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정청탁의 주체는 전 국민(누구든지)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됨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에는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이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국장,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까지 포함됨

부정청탁

- 청탁금지법상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련 공무원, 발주처 담당자 등에게 법령 및 관련 절차를 위반한 모든 형태의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음

직접 청탁 제외 사유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되고, 제3자를 위하거나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만 제재대상이 됨
- **본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접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청탁행위의 직접적 법률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그러나, 제3자의 명시적인 부탁이 없음에도 본인이 아닌 제3자를 위하여 직접 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됨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4

부정청탁금지행위 세부유형

부정청탁금지행위 유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말함

- 인가 허가 등의 업무처리
- 행정처분 형벌부과 감경·면제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특정인 계약 선정 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개입
- 행정지도 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 재판 등 개입
- 상기 유형에 대한 지위 권한 남용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5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방지를 위해 7가지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7가지 예외 사유>

- 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 행위 요구
- ②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③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 ④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 ⑤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⑥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⑦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공개적인 요구 : 요구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부당청탁의 예외 사유에 해당 청탁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함
(공개된 장소에서의 1인 시위, 언론매체 또는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한 요구 등)
-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외에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가 주체가 되어 고충민원을 받은 그대로 전달해야 함
- 전체적인 의미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보충하여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새로운 청탁에 해당함
- 사회상규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청탁의 동기나 목적, 청탁의 내용,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청탁수단이나 방법 등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6

업무 시 유의사항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 대상이 됨
- 부정청탁이 아닌 경우
 - 공개적인 간담회 및 공식적인 협의회를 통해 회사의 민원을 요청하는 경우
 - 법령에 따른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직무 또는 법률에 근거한 확인·증명 등의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한 법령·제도·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진정

업무상
유의사항
Don't

법 위반 유형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 처리 요청
- 일반 민원과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 사항을 지연·면제 요청
-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각종 시정 명령을 약화시키도록 요청
- 입찰에 참가한 상태에서 친분이 있는 발주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입찰 업무 담당자에게 당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잘 봐달라는 등 부탁하도록 요청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7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Q&A)

질문

- 고교 동창회에 참석하였다가 동창회 종료 후 참석자 중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창생 3명을 따로 불러 주점에서 그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술을 접대하고 귀가하면서 각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누어 주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답변

- 동창생인 공직자 3명은 각자 50만원 상당(=200만원÷참석자 4명)의 향응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고, 접대 및 상품권 제공 행위는 동조 제5항 위반 행위에 해당함

질문

-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함께 이수하여 알게 된 정부 중앙부처의 국장을 별다른 용건이 없는데도 자주 만나 식사나 골프 등을 함께 하며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는데 그 접대 금액의 총액이 연간 500만원 가량에 이른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답변

- 식사나 골프 등의 향응·접대는 모두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무원은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것에 해당하여 동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비용을 부담한 자는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동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것임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7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Q&A)

질문

- 중학교 동창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친구의 남편이 마침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 친구에게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합계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제공하였다면?

답변

- 공무원에게 직접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한 경우라도 제3자에 대한 금품 등 제공이 공무원에 대한 제공과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청탁금지법에 따라 명목과 무관하게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질문

-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추석인사로 2만 8천 원 상당의 떡을 선물하는 경우는 가능한지?

답변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허용될 수 있고, 청탁금지법 상으로도 가액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함
- 약속한 선물이라도 뇌물 또는 부정한 금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가급적 전화나 이메일로 마음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점검사항
선물, 접대, 기타 혜택 제공 및 제공 약속	상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가 선물, 접대 기타 혜택 제공을 받는 개인과 직무상 관련을 맺었는가? • 선물, 접대 기타 혜택 제공을 받는 개인이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인가? • 선물, 접대 기타 혜택 제공을 받는 개인이 받은 선물을 직무상 관련이 있는 인물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가? • 선물, 접대 기타 혜택 제공을 받는 개인이 현재 당사와 사업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나 기관에 속해 있는 경우인가? • 선물, 접대 기타 혜택 제공이 업무관련자의 배우자, 가족, 기타 제3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인가?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하는 선물, 접대 기타 혜택 제공의 가액이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인가? • 이미 해당 개인에게 지난 1년 동안 3회 이상 선물, 접대 등 기타 혜택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인가? • 지난 3개월 동안 이미 해당 개인 또는 해당개인이 속한 회사나 기관에 선물, 접대 등 기타 혜택 제공이 이루어졌으며 합계 금액이 법인에서 정하는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인가? •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의 선물, 접대 기타 혜택 제공인 경우인가?
	성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 접대 등 기타 혜택 제공을 받는 개인이 속한 기관이 당사와 같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접대 기타 혜택 제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가? • 선물, 접대 등 기타 혜택 제공의 성격 또는 금액상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인가? • 선물, 접대 기타 혜택 제공의 성격 또는 금액상 관련 내용을 내부보고서 및 회계장부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는 경우인가? • 부당 이득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획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점검사항
선물, 접대, 기타 혜택 제공 및 제공 약속	상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거래선을 초청하지 않고 행사 초대를 명목으로 특정 거래선 담당자만을 초대한 경우인가? 당사가 초대한 개인과 직무상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인가? 초청대상자가 현재 당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상 결정을 앞두고 있는 회사 또는 기관에 속한 경우인가? 행사 초대를 받은 개인이 한국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 또는 국공립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인 경우인가?
	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중 제공하는 교통, 숙박 등 편의의 가치가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가? (비즈니스 좌석의 항공권을 제공하거나 특급 호텔에 묵게 하는 경우 등) 행사 중 제공하는 편의 등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선별된 일부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경우인가? 초청대상자가 당사가 주최하는 유사한 행사에 반복적으로 초대된 사실이 있는 경우인가? 초청대상자가 속한 기관 또는 회사가 당사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초대하는 행사의 참석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인가? 초청대상자에 거래상대방 등 업무 관련자 이외에 업무 관련자의 배우자, 가족, 기타 제3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가? 행사 관련 프로그램 중에 사업목적과는 무관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가? 행사의 성격 또는 금액의 크기상 비용 내역을 내부보고서 및 회계장부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인가?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점검사항
부정한 청탁	상대방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청탁하는 경우인가?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경우인가? •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인가?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또는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경우인가? •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이 없는 단순한 청탁인가?

9. 2021년 12월 30일 시행 개정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9.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

01 기본 방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2. 30 시행
- 집행 체계 개편 -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 제재 위주의 공적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
-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등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
- 혁신 경쟁 촉진 -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을 실효적으로 해소

02 정보교환행위를 부당공동행위 유형에 포함

현행	개정안	영향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 정보교환행위 명시하지 않음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교환행위 포함	정보교환에 대하여 기업에 대한 처벌 증가 예상

- 최근 담합의 한 형태로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주요 국가에서도 담합 또는 공동행위 유형으로 규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 명확화**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의 대상 정보를 ① 상품/용역 원가, ② 출고량/재고량/판매량, ③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명시함
- 다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보교환담합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추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됨

9.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

03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현행	개정안	영향
<p>현행 과징금 부과 상한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합 10% - 시장지배력남용 3% - 불공정거래행위 2% 	<p>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 2배로 일괄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합 20% - 시장지배력남용 6% - 불공정거래행위 4% 	<p>과징금 부과기준의 대폭 상향에 따라 제재 대상 기업의 손익구조 및 평판에 악영향</p>

- 과징금 부과율 상한 및 정액 과징금(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상한이 2배씩 상향 조정되어, 앞으로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임
- 적용 시기에 관하여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021.12.30)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행위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됨

04 해외계열사 관련 공시 강화

현행	개정안	영향
<p>해외주주사 관련 공시규정 없음</p>	<p>기업집단 동일인에게 해외주주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동일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부과</p>	<p>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주주사(롯데홀딩스 등 일본 계열사) 관련 주주 및 출자 현황 공시</p> <p>동일인에게 공시 의무 최종 부과</p>

- 개정 공정거래법은 해외계열사 공시기준을 강화하여, 동일인(총수)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와 순환출자 현황과, 동일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

9.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

05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현행	개정안	영향
관련 규정 없음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 가능	공정거래 분쟁 관련 소송 증가 및 기업의 영업활동 등에 악영향 불가피

-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06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현행	개정안	영향
관련 규정 없음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거부 불가, 자료제출과정에서 기업의 민감한 영업정보 유출가능성 높아짐

-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